

실직자 재교육보다는 대학생 직업능력 개발에 관심을

조 용 하
동아대 교육학과 교수



1. 정부의 실업 대책 : 예방 아닌 사후 대책

한 국 경제는 금년 상반기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3.8%를 기록함으로써 1980년 이후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평균 성장률이 5.5%인 것과 대비해 보면 급격한 추락세를 실감할 수 있다.

지난 3월 이후 실업률은 정부의 예상치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실업률은 2.1%, 실업자는 45만 1천 명 정도였으나, 통계청의 공식 집계나 노동부의 실업 급여 창구를 통해서 유추해 보면 올

해 평균 실업률은 6.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경제 활동을 중단한 개인사업자, 명예퇴직자, 조기퇴직자 등은 정부의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질 실업 인구는 400만 명에 달할 것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6·4 지방선거 이후 50대 상장회사들의 정리해고가 본격화되면서 실업자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실업대란의 여파는 올해 대졸자 취업률을 10% 이하로 떨어뜨렸다.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한 소수의 이공계 학과 전공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대졸자들은 실업 회오리에 노출되어 있다. 각 대학의 '취업정보센터'는 금년의 취업실태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장회사들마저도 신

입사원을 선발했다가 경기가 악화되자 발령을 연기하거나 합격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현행 법규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한 처벌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의 실업대책은 노동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이 협조하는 가운데 실업발생 최소화, 일자리 마련, 취업능력의 제고, 실직자 생활안정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하려는 프로그램은 실직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자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인데, 재원 확보에 대해 부처간의 합의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실업대책은 '실업 예방'보다 '사후 대책' 쪽에 더욱 무게가 실려있는 듯하다.

2. 수익사업화한 대학 실직자 교육 프로그램

정부는 경제성장률 저하와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실직자 재취업 교육과정' 개설을 대학에 권장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대학들이 노동부의 승인 아래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 교육 여건으로는 실시에 따른 성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대학에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이라는 교육개혁의 기치 아래 '사회교육원' 혹은 '평생교육원'이 난립되었다. 명분은 대학의 사회 봉사 기능에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사회의 교육적 필요나 관심, 요구를 수렴하기보다는 단지 수익사업에 몰두해 왔으며, 목적사업이나

지역사회 봉사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은 지역사회의 소규모 교육사업들을 잠식해 버림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강좌 개설 및 학습자 관리에 허점을 보여 그 존재의미를 재론할 여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회교육원에서는 이미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교육원의 직제를 보면 책임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가 배치가 소홀히 되어 있고, 행정 편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프로그램 부실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강좌의 개설도 지역사회의 요구와 필요를 근거로 하지 않고, 유행이나 시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실태조사 없이 노동부의 기금을 받아내는데 유리한 수강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늘어나는 실직자를 어떻게든 수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양적 팽창에 집착한 나머지,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또한, 현재 대학 실직자 교육 프로그램은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고, 교육 이수자들의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부족하다. 가령 '위장 실직자'의 문제는 바로 고용보험기금의 누수 가능성을 가져온다. 현 제도로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직자가 중도에 취업이 되면 수강 자격이 상실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를 해당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의 관리 방안이 전무하여 훈련기금이 계속 누수될 가능성도 있다. 대학의 재교육 프로그램은 이론 위주의 총론식 강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직 창구와 연

제한 취업 알선망도 전혀 없어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줄 선물은 막연하기 짝이 없다. 『시사저널』 5월 28일자 “재교육을 통한 취업률이 결코 10%를 넘지 않으리라”는 기사는 수준 미달 프로그램과 제도 때문에 실직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제 대학은 ‘고용보험기금’이라는 당근에 끌려 백화점식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대학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내적 충실에 관심을 더욱 더 집중시켜, 재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졸업생들을 위한 리콜(recall) 제도를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반면, 급증하고 있는 실직자의 재교육은 종합 재취업 교육기관인 ‘중앙인력개발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에 일임해서 취업과 직결되는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개설하여 무엇보다도 실직자의 재교육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나 산업체·기업체와의 협조체제를 갖추는 데 주력해야 한다.

3. 대학 운영의 내실화가 급선무

최근 우리 대학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경쟁적 몸불리기의 후유증으로 도산하거나 파산의 위기에 처한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다수의 대학이 교직원 봉급을 동결하거나 상여금을 삭감하였고 행정기구의 통폐합이나 신규 교직원 임용 억제도 표면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MF 이후 재학생의 군입대 휴학과 편입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대거 이탈로 등록금 수입이 격감해 대부분의 대학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던 대학들이 운영 자체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던 산학협동 연구도 고사 직전에 이르렀다. 2003년부터는 대학생수가 지금보다 10만 명 이상 감소하게 되어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 대학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재구조화(restructuring)에 혼신의 힘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고비용 저효율’의 원인이 되는 각종 제도와 운영기법을 지양하고 인접대학간, 그리고 대학내의 인접학과나 계열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내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대학은 실직자 재교육보다는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

조용하/연세대 교육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퍼시픽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아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고 한국사회교육학회 이사과 영남사회교육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 『사회교육의 의미』, 『신교육사회학』이 있으며, “연수와 교육훈련에 있어서 성인지도의 방법”, “M. S. Knowles' Andragogy as a Theory of Adult Learning”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